

가축분뇨 자원화 뉴스

홍보부

친환경 축산 표준모델 개발

농림부 공청회, 친환경축산 개념 정립... 기준 설정 의견들어



▲ 지난 13일 수원 농업연수원에서 개최된 친환경축산 표준모델안 공청회 현장

농림부가 농지법개정으로 농지내 축사진입이 용이하게 되는 반면에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등 축산환경을 둘러싸고 있는 여건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자연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 실현을 목적으로 환경보전과 자원순환, 가축건강과 경관보전, 경영관리 등 방향을 제시하는 '친환경축산 표준모델'을 개발했다. 특히 이 표준모델은 앞으로 축산방향의 목표가 됨은 물론, 각종 정책 및 재정 지원까지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지난 11월 13일 농업연수원 대강당에서 '친환경축산 표준모델' 개발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

여 관련기관 및 학계, 축산농가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는데 친환경축산의 개념정립을 명확히 하고 친환경축산의 구성요소별 기준설정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환경친화적인 축산경영, 그리고 소비자가 만족하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 공급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철 축산자원순환과장은 "향후 축산업의 미래는 자연과 조화되는 환경친화적인 축산경영의 효과적 달성 여부에 있는 만큼 축산농가 스스로 표준모델의 방향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각종 정책 및 재정지원을 연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조총희 경기도청 축산과장, 정선현 대한양돈협회 전무, 황금영 친환경축산협의회장, 장동일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장, 이광용 아름다운농장만들기실천협의회 대표, 성경일 강원대 교수, 이상락 건국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친환경축산, 시설개선 자금지원 뒤따라야

지정토론자로 나선 양돈협회 정선현 전무이사는 "친환경축산의 시대적 흐름은 맞지만 생산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무엇보다 시설개선과 보

완이 중요하고, 따라서 시설개선 자금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축사표준설계도와 달리 생산성·친환경축산이 모두 실천 가능한 효과있는 모델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순천축협 황금영 조합장 또한 "시설현대화 자금 지원 시 보조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정부차원의 대책을 강조했다.

한편 한국소비생활연구원 김연화 원장은 현재 개발된 모델이 규제위주로 되어 있다며 규제가 아닌 실천할 수 있는 지침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장동일 회장은 구체적인 수치와 정량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청중석에서는 단지 모델만으로 축사를 짓는 것이 어

렵다며 샘플농장을 본보기로 보여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아울러 시설뿐만이 아닌 운영방법까지도 제시하는 시범 교육농장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이번 공청회와 서면으로 접수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친환경축산 표준모델(안) 기준설정 방향을 정해 12월경 최종 표준모델을 확정키로 하고, 조감도 등이 포함된 팜플릿 형태로 제작 보급하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미 보급된 축사 및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도 이 모델에 부합되도록 수정 개편하여 보급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친환경적인 축사 설치 및 자원화 처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 돈사 적정 사육기준 완화 필요

- 양돈협, 현행 적정기준은 최소 확보면적 의미

돈사의 적정 사육기준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11월 5일 농림부에서 개최된 축사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기준 검토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행 축사의 적정 사육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는 최근 높은 시설비용을 들여 최신식 무창돈사를 지어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가 늘고 있으나, 현행 사육기준이 규제가 되고 있으며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그 기준이 강하기 때문이다.

양돈협회는 특히 처음에 기준을 설정했을 때는 평균적인 적정 사육면적으로 기준을 정했으나, 정부가 규정 개정을 통해 최소 확보면적인 것처럼 과태료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기준이 적정면적이 아닌 규제가 되고 있다며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개방돈사보다 무창돈사 신설이 늘고 있는 점을 감안, 돈사구조의 변화에 따라 최소 확보면적 규제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농림부에서 1,000두 이상의 돼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축사시설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현재 돈사형태는 원치돈사(77.2%)가 무창돈사(51.3%)보다 많으나 5천두 이상 규모의 농가는 무창돈사 비율이 높고 매년 무창돈사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림부는 이날 검토회의를 통해 현재 적정 사육기준 가운데 일관경영의 경우 0.89㎡인 기준을 0.70㎡ 정도 수준으로 낮춰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아울러 무항생제 축산물 기준 및 표준설계도 사육밀도 기준도 개선해 나가기로 협의했다. 한편 각 기관과 단체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기준 완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 퇴·액비 이용 규제 완화될 듯

- 농림부,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대책 추진

퇴·액비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관련 제도가 완

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 대책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퇴·액비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분뇨 배출원 단위 및 액비살포면적 확보 의무량 등이 조정될 방침이다.

액비살포면적 확보의 경우 그동안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의 면적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으며, 현행 기준은 돼지 1두당 약 640㎡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농림부는 이를 300㎡ 미만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액비 이용을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와 함께 가축분뇨 배출원 단위 또한 현행 두당 8.6kg에서 5~6kg으로 조정하는 등 관련 제도의 현실화 및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행 규정상 액비화 생산 농가는 액비를 6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갖추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이를 처리공법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 액비화 생산농가에 대한 시설기준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 '바이오가스' 충분한 검토가 우선

유형처럼 떠오르는 '바이오가스' 사업이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0월 24일 배재대학교 학술지원센터에서 우원식·조정식·우윤근 의원 주최 '유기성폐기물 자원화 - 바이오가스의 미래는 있는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부분 바이오가스 사업이 에너지 생산 분야뿐만 아니라 분뇨처리에 있어서도 실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등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했다.

산업자원부 담당공무원은 "바이오가스 사업을 추진하려면 각 부처간에 공동으로 별도 추진팀을 구성하여 자원화 활용도 및 경영분석, 지원제도 등을 검토하

는 등 충분한 준비를 거쳐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부와 환경부 담당공무원 또한 사업추진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유행처럼 거론되는 바이오가스 사업에 관련된 모든 문제점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내년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지원대상 모집

- 농림부, 개소당 20억원씩 400억원 지원

농림부는 일선 시군을 통해 2008년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다.

농림부와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내년도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지원사업'은 개소당 최고 20억원까지 총 4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양질의 가축분 퇴액비 토양환원을 위해 화학비료와 농약을 감축하면서 토양건전성 및 농업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자연순환농업추진대책을 추진하면서 축산조직과 경종조직간 협약 체결을 통해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하는 조직체를 적극 육성한다는 방침으로 이를 위해 자연순환농업 추진 전문경영체에게 퇴액비를 이용한 농산물의 출하선금과 퇴액비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자원화해 농경지 환원을 촉진하기 위해 자연순환농업 협약을 체결하거나 가축분뇨 퇴액비 생산 및 이용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경종과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한 농축협 및 영농조합법인 등이다.

지원조건은 개소당 20억원 내외로 경영체 규모와 사업실적 및 계획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융자 80%, 자부담 20%를 원칙으로 융자금의 금리는 연리 2%, 3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이다. 영농조합법인

등 협동조합 이외의 사업자는 기금 지원액의 125% 이상 사업을 시행한 경우 자부담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신청을 원하는 경영체는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를 해당 시군 축산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 농림부 축산자원과(02-500-2123~5), 해당 시군 축산담당부서, 농협중앙회 축산컨설팅부(02-2127-7417)

☒ 다살림영농조합법인, 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기공



다살림영농조합법인(대표 심우진)은 지난 10월 30일 진천군 초평면 용산리에서 이성중 진천축협장, 김달수 진천농업기술센터소장, 다살림영농조합법인 농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심우진 대표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성원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며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및 퇴액비의 생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친환경 축산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기공되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은 국비 7억5천천만원, 도비 3억원, 군비 5억원, 융자 9억5천만원 등 총 25억이 투입되며, 대지 7천400㎡, 건평 715평, 처리능력 1일 100톤의 규모로 지어진다.

처리방법은 SCB발효시설방식으로 전량 액비 및 퇴비로 만들어지는 무방류 자원화 시설이다.

다살림영농조합법인은 지난해 12월 청원 오창농협 친환경농업단지에, 지난 2월에는 진천 문백농협 친환경 특수미 작목반과 퇴액비 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다살림영농조합법인은 회원 16농가에서 3만 5천두의 돼지를 전국 최초로 무항생제로 사육하고 있다.

☒ 축산과학원, 축산분야 온실가스 저감 노력 만화로 제작 배부



축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 만화책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원장 이상진)은 최근 국제적으로 크게 문제되고 있는 '온실가스'와 관련해 축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오해를 줄이고 온실가스 저감방법을 널리 알리기 위한 책자를 제작, 관련부처 등에 배부했다.

‘축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이렇게 줄이고 있습니다’는 제목의 이책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수있게 만화로 제작됐으며 ▲온실가스의 정의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발생량과 농업에서의 발생량 ▲축산에서 온실가스는 어떻게 발생하나 ▲가축분뇨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축산과학원의 노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원색으로 총 25절지 12쪽 분량이다.

※문의 : 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031-290-1714), 축산기술지원과(☎ 031-291-1778) **양동**